

40兆 중고차시장 놓고 大·中企 힘겨루기 ‘수면위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고심 대기업 완성차社 진출 가능성 비차車사업협회 “해외업체는 이미 진출” 車매매연합회 “대기업 진출 안돼”

연간약 40조원에 달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줄다리기 본격화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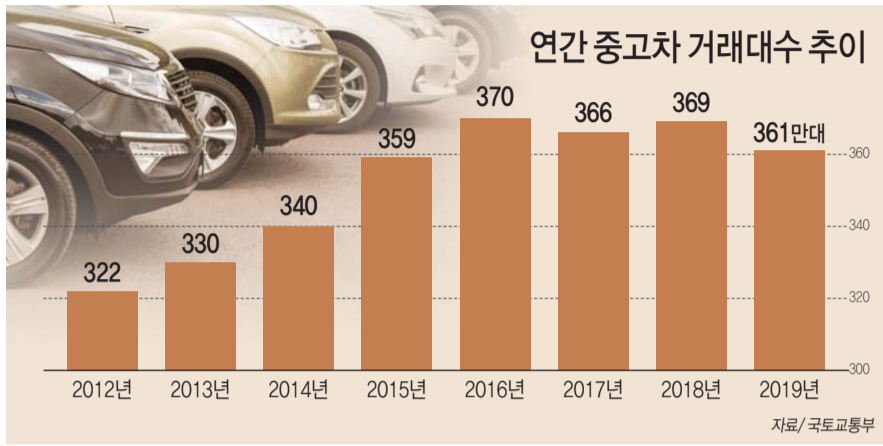
중고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이 먼저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현재 중고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5800여 개가 넘는 중소 중고차매매상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



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사업협회, 수입차판매업체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사업협회는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동차사업협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자동차사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제조회사들이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제

품 관리, 애프터서비스(A/S) 등을 통틀어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자동차 제조는 선진화돼 있는데 중고차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 다 낙후돼 있어 완성차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새로운 경쟁력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는 “국내에 진출한 벤츠나 BMW 등도 중고차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해외(완성차)브랜드는 되고, 국내 브랜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3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총 6년(3년+3년)간 보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이후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진입을 추가로 막기 위해 이번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연간 거래된 중고차는 361만대 정도다. 올해 들어 1·4분기에만 약 90만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1대당 평균 거래가격이 1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시장 규모만 4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중고차 매매업체는 총 584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케이카(K-CAR), AJ 셀카, 오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중소기업, 소기업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중고차 매매업에 실제 뛰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관련 진출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완성차 회사의 시장 진출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추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우선적으로 업계간 상생협약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통해(대·중소기업이)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볼 계획”이라며 “다만 상생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심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고의 시간 이겨낸 디스플레이 ‘폭풍성장’ “저탄소 발전전략’, 130만 일자리 없앨 것”

(하반기)

TV패널값 최대 10% 상승 전망 스마트폰·TV시장 회복 분위기 OLED 패널 대량 양산 돌입 등 디스플레이 시장 호재 한가득



LG디스플레이 파주클러스터.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하반기 ‘폭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오랜만에 대폭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포스는 7월 TV 패널 가격이 지난달보다 6~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2와 55형은 8~10%, 43·50·65인치 패널은 6~8% 수준이다.

최근 들어 패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글로벌 유통망이 6월 들어 락다운 해제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패널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반도체와 신가전이 큰 역할을 했지만, TV 부문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 패널 사업을 정리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LCD 패널 생산을 중단기로 하고, 올 초부터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들어 L8라인을 철거하고 ‘큐디(QD)’ 장비 반입을 시작했고,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해 파주 P8 라인을 가동 중단했다.

3분기에는 더 긍정적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7월 초 LCD TV 패널 가격이 6월 대비 55형 5.2%, 32형도 6.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5월 기준 한국과 중국의

3분기 패널 주문량이 2분기 대비 각각 30%, 10% 증가할 것이라며, 6월에는 중국 업체들이 구매 계획을 상향 조정하며 예상 주문량이 25%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TV 시장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프로모션 확대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도 3분기 본격 가동될 전망이어서 OLED TV 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OLED 패널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도 주요 요인이다.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브랜드가 신형 모델 출시를 예정한 가운데, 스마트폰 수요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당장 2분기에도 스마트폰 시장이 예상 밖의 실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서프라이즈에 큰 몫을 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중국의 추격세도 일단은 잠잠해졌다. 당초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을 모두

OLED 패널로 바꾸면서, 중국 BOE에 공급을 타진했다가 품질 검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 결국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할 중소형 OLED 패널 라인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시장 회복도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중요한 호재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등 신형 모델 출시가 가속화하면서 LCD 패널 뿐 아니라 P-OLED 등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변수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해지면서 TV 시장도 예상보다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것. 중국 업계가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시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도 우려됐다.

유안타증권 김광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승추세가 4분기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 패널 2사가 LCD 생산을 하지 않아도 중국 내 BOE B17과 샤프 광저우팩 등이 램프업을 본격화하면서 수급불균형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철강 등 5대 산업계 토론회 정부 권고안 우려 한목소리 “제조업 생산 반토막 날 수도 현실성 떨어져 재검토 필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 수립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올해 2월 관련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8일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의 이상엽 총괄간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는 “민간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인당)에서 최저 40%(5인) 감축하는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산업계, 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 남정민 실장은 “이미 2050 LED를 제출한 EU와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며 “감축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본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라며 “그러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 팀장도 “시멘트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술”이라며 “폐콘크리트에서 재활용 가능한 시멘트 미분말이 2%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포럼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폐콘크리트를 해외에서 대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효수 팀장은 “민간포럼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해당설비의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감설비는 100% 설치하는 가능하더라도,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로 나선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 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운 기자 ysw@